



보훈,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 내다보아야…통일과 국민통합에서 진정한 가치 실현

보훈, 미래를 위한 제언 독립-호국-민주 이해와 가치

사람의 인생에는 시기별로 그에 응당한 소임이 주어진다. 청소년기에는 학업에 열중하여 미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어진 과업에 충실해야 한다. 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면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여야 한다. 한 개인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도 마찬가지다. 그 처한 시대에 따라 시대적 소임, 즉 시대정신이 주어지기 마련이다. 국가와 국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을 보전하기 위한 방책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반대로 시대정신을 망각하거나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그 나라는 존재를 연속할 수 없으며, 공동체의 발전도 도모할 수도 없다.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그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보훈 정책의 3대 기둥으로 독립, 호국, 민주로 정한 것은 시대정신 적확하게 읽은 것

근대 100여 년의 우리 역사는 서구의 300~400년에 맞먹을 정도로 격동의 시대를 보냈다. 시작부터 비극의 연속이었다. 서구 열강의 각축과 위협 속에 우리는 반강제적으로 문호를 열어야만 했다.

이후 견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처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일제 군국주의자들의 말발굽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는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부터 40년, 국권이 완전히 상실된 한일병탄으로부터는 35년에 달했다. 무려 한 세대를 넘긴 그 악몽의 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1945년 8월, 마침내 일제가 패망하였다. 우리는 국권을 회복하였고,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빼앗겼던 빛을 되찾은 광복(光復)의 기쁨도

〈글 쓰는 순서〉

1. 평화를 향하는 보훈
2. 독립-호국-민주의 이해와 가치
3. 국가유공자, 정체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4. 새로운 지평, 보훈외교
5. 보훈과 복지
6. 보훈과 여성
7. 보훈과 공공의료
8. 보훈과 문화
9. 통일시대를 향한 보훈
10. 보훈의 미래가치

잠시였다. 완전한 독립국을 꿈꿨던 우리의 소망은 이내 물거품이 돼버렸다. 미·소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국토는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광복 5년만인 1950년 6월에는 동족상잔의 참극이 이 땅을 덮었다. 민주와 자유를 추구해온 우리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어야만 했다. 슬픈 선열들이 피로써 되찾은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자 최대 과제였다.

1948년 8월, 이 땅에는 자유민주를 표방한 대한민국이 출범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출신으로 항일투쟁 대열에 섰던 인물이다. 그러나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독재자로 낙인찍혀 1960년 4·19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났다.

이듬해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 역시 18년간의 장기집권을 통해 슬한 반민주 행각으로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30년간에 걸친 독재정권 하에서 슬한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피 흘리고 목숨을 바쳤다. 민주주의의 체제에서 자유와 민주는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가치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자유와 경제적 풍요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국권 회복을 위해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풍찬노숙하신 애국선열, 적의 침입에 맞서 자신의 몸을 초개

와 같이 던진 호국용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제단에 피를 뿌린 민주열사들의 열정과 헌신의 결정체인 것이다. 우리는 이분들의 애국적 삶과 공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보훈정책의 3대 기둥을 독립, 호국, 민주로 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는 매 시기에 요구됐던 시대정신을 적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난극복 과정에서 민중들이 이 땅 지켜온 역사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우리 민족은 대대로 국난극복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왔다. 16세기 중엽 임진왜란 당시의 항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무려 7년간에 걸쳐 왜구들이 이 땅을 짓밟았으나 결국 그들을 이 땅에서 물리쳤다. 그 긴 세월을 견디며 종묘와 사직을 지켜낸 것은 일반 백성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 농민들은 논밭을 갈던 농기구를 들고 나섰으며, 승려들은 불법에 어긋나는 살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토와 백성이 보전되지 않고서는 농사일도 염불도 한낱 공염불이 되고 만다. 세상에 제 나라를 지켜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랴.

민중들이 이 땅을 지켜온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구한말 일본군이 또다시 이 땅을 노리자 쟁, 노루 잡던 산포수들은 의병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여염집 아낙네들은 나라 빛 갠이라며 손가락과 머리에 꽃고 있던 금붙이들을 내놓았다. 한국전쟁이 치열하던 때 학생들은 ‘책 대신 수류탄과 총을 달라’며 책가방을 내던지고 자원입대하였다. 또 오랜 독재정권 하에서 무수히 많은 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감옥과 거리에서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고초를 겪었다. 이는 현대사에서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 근래의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선조들은 방관하지 않았다. 바깥의 적들을 향해 총칼을 들거나 내부의 불의에 맞서 맨주먹으로 일어섰다. 물론 이는 국민된 자의 본분이자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니 여기에 지역 구분이 있을 수 없고 노소와 성

미래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꿈도 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통일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별, 계급이 문제일 수 없다. 민중항쟁이 숭고한 것은 차별 없는 동참과 그 목적이 순수했다는 점이다. 훗날 훈장이나 연금을 받기 위해 항일투쟁에 나선 애국지사가 있었을까. 민주화운동 표창을 받기 위해 감옥행을 자처한 민주열사가 있었을까. 오로지 제 나라 제 민족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내던졌을 뿐이다.

세 가치, 선후 우열 개념 아니라 나라사랑이라는 맥락에서 같아

독립-호국-민주 세 장르는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 각각 그 시대정신에 호응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지고지순의 절대선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세 가치는 일면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라사랑’이라는 근본정신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들 세 가치는 선후나 우열의 개념으로 구분될 지를 것이 아니라 상호 공존과 협력의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위기

에 처한 나라를 지켜내고 이 나라의 온전한 민주체제를 위한 노력은 같은 선상의 애국활동인 것이다. 마치 같은 방향을 향해 달리는 두 개의 철길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적이려면 보훈은 빛나는 나라사랑의 전통을 통해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 차원의 보훈은 단순히 이들의 과거 활동에 대한 예우나 보상 차원이 아니다. 보훈은 국가와 국민들의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보훈은 특정인에 대한 시혜나 불우이웃돕기 같은 선심 정책이 돼선 안 된다. 즉, 보훈은 위기에 맞서 합심한 우리 모두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후세에 널리 전하는 거룩한 사업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보면 국가나 민족에게 위기는 언제나 닥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경위기 등 변수가 많은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민족은 또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갖게 된다.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은 90년이 지나 문민정부 말기의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으로 다시 빛을 발한 적이 있다. 소중한 결혼반지나 아이의 돌잔치 반지를 선뜻 내놓은 그들을 현대판 의병이요, 애국투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미래 닥칠지 모를 국가위기 대비 국민 가슴 속에 나라사랑 심어야

자칫 보훈은 과거에 매몰되기 쉽다. 과거의 행적에 대한 연구, 평가가 주요업무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일을 다룬다고 해서 생각이나 행동마저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된다. 혹여라도 보훈이 지난 일에 대한 보상 차원에 머문다면 국민연금이나 보험회사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역사적으로 보훈은 그 시선이 미래

를 향해 있어야 한다.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보훈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국가위기에 대비해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미래는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중한 꿈도 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통일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앞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외세에 맞서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바친 열정을 이제는 통일의 길로 모아야 한다. 선열들이 한 몸 바쳐 되찾고자 했던 조국은 온전한 조국이였다. 통일은 통일부만의 일이 아니다. 보훈을 통해 국토통일과 국민통합을 이뤄낼 때 진정한 그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정운현 언론인, 역사학자,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공동기획: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 보훈교육연구원

기념식 현장, 미래 공동체 번영의 에너지가 되다

독립·호국·민주, 국가기념일과 기념식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겨진 독립·호국·민주의 순간과 그 현장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기 위해 국경일 혹은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그 역사가 서린 현장에서 정부기념식을 개최한다. 그것은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뜻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되새겨 미래 민족공동체의 번영을 향한 에너지로 삼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 뜻에서 독립·호국·민주 관련한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은 매년 찾아오는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선열들이 강토에 흘린 피와 눈물의 역사’이고, 그것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이다.

국경일, 3·1절과 광복절

국가적인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국경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

국기념일이나 전승일, 국왕탄생일 등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3·1절과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3·1절과 광복절은 각각 조국을 되찾기 위한 민족운동인 3·1운동과, 민족의 독립을 이뤄낸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행사에는 매년 대통령과 정부요인사, 주한 외교사절이 함께 참여하는 엄숙한 기념식과 부대행사가 열린다.

독립·호국·민주 국가기념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국가기념일 중 ‘독립’ 기념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과 순국선열의 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 6·10만세운동기념일이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일은 1919년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날은 1905년 실질적인 국권침탈 조약인 을사늑약을 전후해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한 것을 기리는 날이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추모행사를 1997년부터 정부기념식으로 복원해 지켜오고 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은 1929년 광주·나주 통학열차에서 조선학생들과 일본학생들의 충돌 이래 11월 3일 광주에서 시작해 다음해 3월까지 전국의 학생들이 참여한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이다. 2018년부터 보훈처와 교육부가 공동주관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6·10만세운동기념일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이 열리게 된다.

이날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식을 기점으로 일어난 독립운동으로, 국내 3대 독립만세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국’ 기념일은 6·25전쟁일과 서해수호의 날,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있다.

서해수호의 날은 매년 3월 넷째금요일로 지정돼 있으며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된 서해 55용사를 기리기 위해 지정됐다.

7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과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턴투워드 부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참전했던 세계 22개국의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날이다.

이 기념일은 지난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행사도 정부기념식으로 개최된다.

‘민주’ 기념일은 3·15의거기념일과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 새봄을 맞으며 각각 창원과 서울, 광주에서 국가기념일 행사를 치러왔다.

여기에 지난 2018년부터는 1960년 당시 3·15의거 이전 이승만 독재정권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구의 2·28민주운동 기념일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일이 각각 국가기념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18년 대구에서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2019년 대전에서 3·8민주의거 기념식이 각각 정부기념식으로 개최됐다. 국가보훈처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1987년의 6월의 6월항쟁을 기억하는 ‘6·10민주항쟁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기념식을 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들어 서해수호의 날 등이 호국기념일로, 대구 2·28민주운동과 대전 3·8민주의거, 6·10만세운동이 각각 새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독립·호국·민주의 각 기념일도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날을 기념하는 것과 함께, 그 현장에서 영웅적인 역할을 해낸 국가유공자들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이 오늘의 살아있는 보훈이다.